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글로벌 관세영향 점검

정부는 어제(4.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한 정책방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응한 자동차 부문 긴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4.10(목) 14:00 정부서울청사)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개최하여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산업부 산업정책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해수부 정책기획관,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야별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위해 기존 대응 체계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글로벌 관세부과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작업반*을 운영하며, 금융위(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산업부(산업연구원, 무역협회), 농식품부(aT), 해수부(KMI), 중기부(중진공) 등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연구기관·협회 등의 협업체계를 적극 활용한다.

*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하위 작업반

특히,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TF의 점검결과는 필요시 장관급 회의체(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를 통해 논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은 동 전담반 회의를 마치면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최근 외환 시장 상황을 점검하였다. 최근 美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금융시장 전반, 주요 국가들의 상황 등과 비교하여 국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지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10)
		담당자	사무관 박진훈 (allen13@korea.kr)

